

2004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한국원자력학회

지방자치단체와의 안전규제 역할분담 방안 연구 II

A Study on the Role Adjustment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I

육동일

충남대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

안상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19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이루어지는 원자력안전규제기능의 효율적인 재분담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원자력안전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를 실천하는 구체적 계획들을 구상하는데 있다. 1995년 지방자치체가 부활된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배분에 있어서 보다 혁신적인 대안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권한배분의 핵심은 집중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그리고 NGO등에 재분배하는 것이다. 특히 원자력안전규제기능의 권한이양수준은 KINS와 중앙 및 지방정부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원자력과 관련된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합리적·민주적·효과적으로 재분배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민주적인 원자력 규제행정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국내외의 원자력관련 권한배분 유형과 제원칙들을 고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앞서 제시된 모델과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규제의 정책, 인력, 조직, 재정면에서 보다 구체적인 상세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에서의 적절하고 민주적인 원자력안전규제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bstract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construct new system and feasible action plans by seeking solutions for more effective redistribution of the nuclear regulatory role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rom 1995 on, since local autonomy system has been reimplemented in Korea, it is imperative to develop reformative alternatives for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core devolution is to redistribute administrative roles and functions which have been centralized, toward both self-governing bodies and communities including NGO. The level of devolution in nuclear regulatory system depends on

how to redistribute nuclear related roles and functions among central/local government with KIN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examine general principles criteria and type of domestic/foreign role adjustment for effective/rational/democratic nuclear regulation. Based on previous model and system proposed, role adjustment action plans are reviewed taking account of the nuclear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localization era. In the long ru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ill be expected to utilize the optimal and democratic regulatory system in Korea.

I. 서론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지방자치단체와의 안전규제 역할분담 모델의 상세 실행 방안과 지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미 제시된 모델과 방안들이 실제상황에 적합한지를 원자력 관련 유관 기관과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원자력 관련시설이 입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기능 및 조직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방사능 방재대책의 전문화 및 정착화 방안을 수립하여 보다 효율적인 원자력 안전규제 행정체제를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II. 정부간 관계와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

1. 정부간 관계의 개념

정부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 IGR)는 일반적으로 중앙-지방정부간,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일컫는 것으로 그것의 개념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김천영, 1998: 94-96; 김천영, 2000: 348-350). 정부간 관계에 관한 개념적 틀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는 앤더슨(Anderson, 1960: 3)의 경우는 정부간 관계를 “연방체계 속의 모든 형태 및 수준의 정부단위 간에 발생하는 활동 혹은 상호작용체”로 파악한다.

2. 지방자치의 제도 정착과 정부간 관계

지방자치로 인한 여건의 변화는 불이익을 받고 있던 지방정부의 잠재된 욕구를 자극함으로써 현재 정부간에 나타나는 갈등 국면을 초래했다고 본다. 근래에 들어 중앙정부도 정부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갈등조정 정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안적이지 못하다.

지방자치의 제도적인 성공을 거두는 한편 정부간에 증폭하고 있는 외부성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부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것의 주된 방법 중의 하나는 정부간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시장가격 기구 밖에서 이루어지던 정부간의 편익과 비용의 불일치 문제를 시장가격 기구 내로 끌어들이는 것과 같은 관련을 맺는다. 이렇게 볼 때 지방자치에 관한 바람직한 이해는 정부간 관계라는 새로운 형식을 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환경보존과 정부간 관계

오늘날 환경보존의 문제는 행정의 수행해야 할 또 다른 과제로 부각된다. 예전에는 환경이 행정의 하나의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행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기능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 결과 환경문제는 과거 특정한 지역과 계층에서 일시적으로 관심을 보이던 것에서 모든 지역의 다양한 환경주체가 공동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사항으로 변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환경보존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과 연관지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의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와 다른 하나는 국가적 차원의 환경문제이다.

4. 분권화와 정부간 관계의 변화

분권화추세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이 사회 각 부문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여러 곳으로 분산되는 것으로 사회 각 부문은 자율성과 참여를 통해 권한을 나누어 갖게 된다(Stanyer, 1976; Smith, 1985; Hogget, 1996). 따라서 분권화는 사회 전체로 보아서는 정부주도에서 민간을 포함한 사회 각 부문으로의 수평적인 권한분산을 의미하지만, 이를 정부간 관계에 한정해 볼 때에는 중앙과 지방간 수직적 권한관계가 수평적 권한관계로 분산되는 것으로 분권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권한의 이양(devolution)을 의미하게 된다(Conyers, 1984:187-188; Kingsley, 1996:422).

5. 중앙과 지방정부간 사무배분

1) 지방이양과 정부간 사무배분

지난 기간 지방이양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한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 추진된 지방이양은 정부간 역할구도의 변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지방이양은 국가사무 보다 지방사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 셋째, 등록사무 등 단순 집행사무와 기관위임사무 및 중복사무 등을 중심으로 이양되고 있어 이양의 실제적 효과가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넷째, 지방이양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태도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중앙-지방정부간 관계에서 점차 공동사무를 통한 기능중복과 상호협력의 영역이 등장하고 있다.

2) 사무구분

행정사무를 성질별로 구분할 때 이용되는 기준들이다. ①사무의 성질, ②법령상 위임형식, ③법령상의 경비부담 관계, ④법령상 감독관계 및 ⑤지방의회의 관여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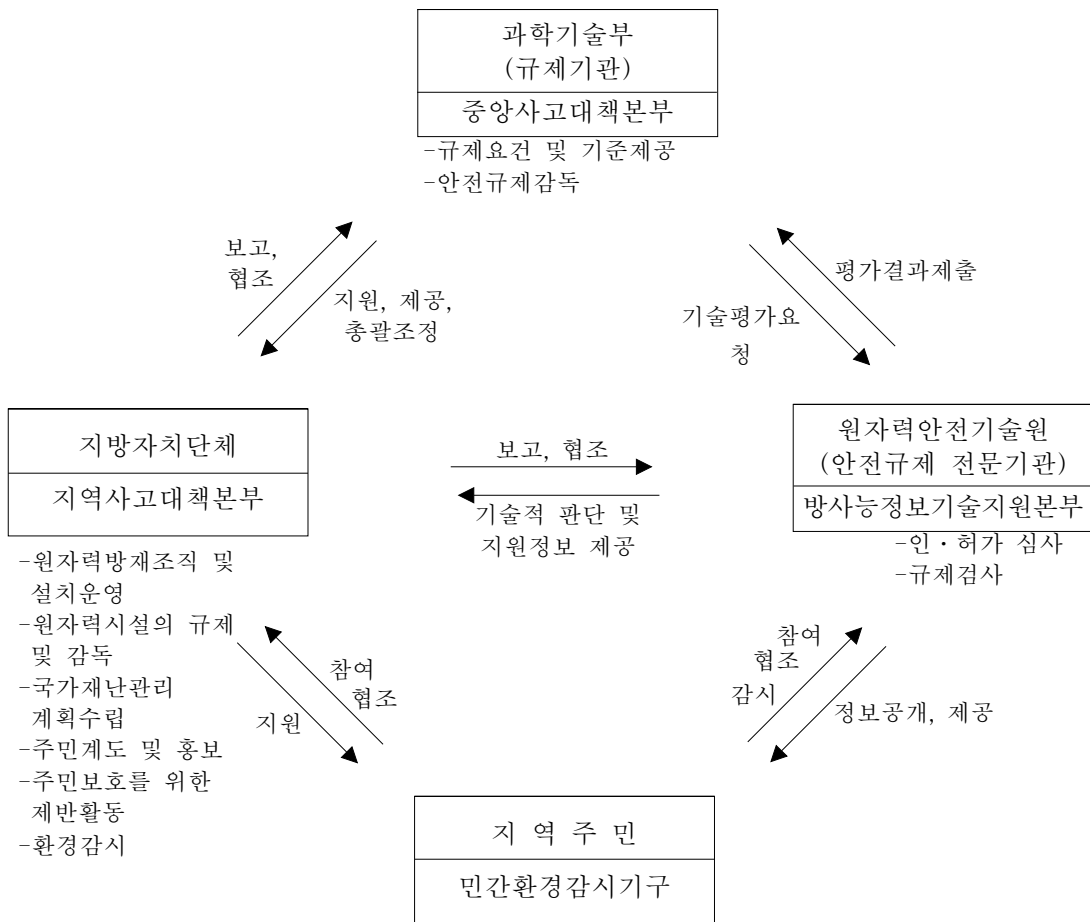
3)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

원자력 안전규제기능과 관련된 사무배분에 적용되는 사무배분 원칙은 계획·집행 분업의 원칙, 중앙과 지방의 연계성 확보원칙 및 협력원칙, 행정의 민주적 및 종합적 처리의 원칙,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행정비용 절감의 원칙, 서비스의 주민밀착성 원칙, 현지성의 원칙, 법적합성의 원칙

등이다. 원자력 안전규제 기능과 관련된 사무배분에 적용되는 기준은 고도의 기술성, 특수성, 전문성, 자치단체의 기술·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전국적 계획행정의 요구에서 나온 사무, 전국적·광역적 견지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 전문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로써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 전국적 법제도화 및 전국적 지침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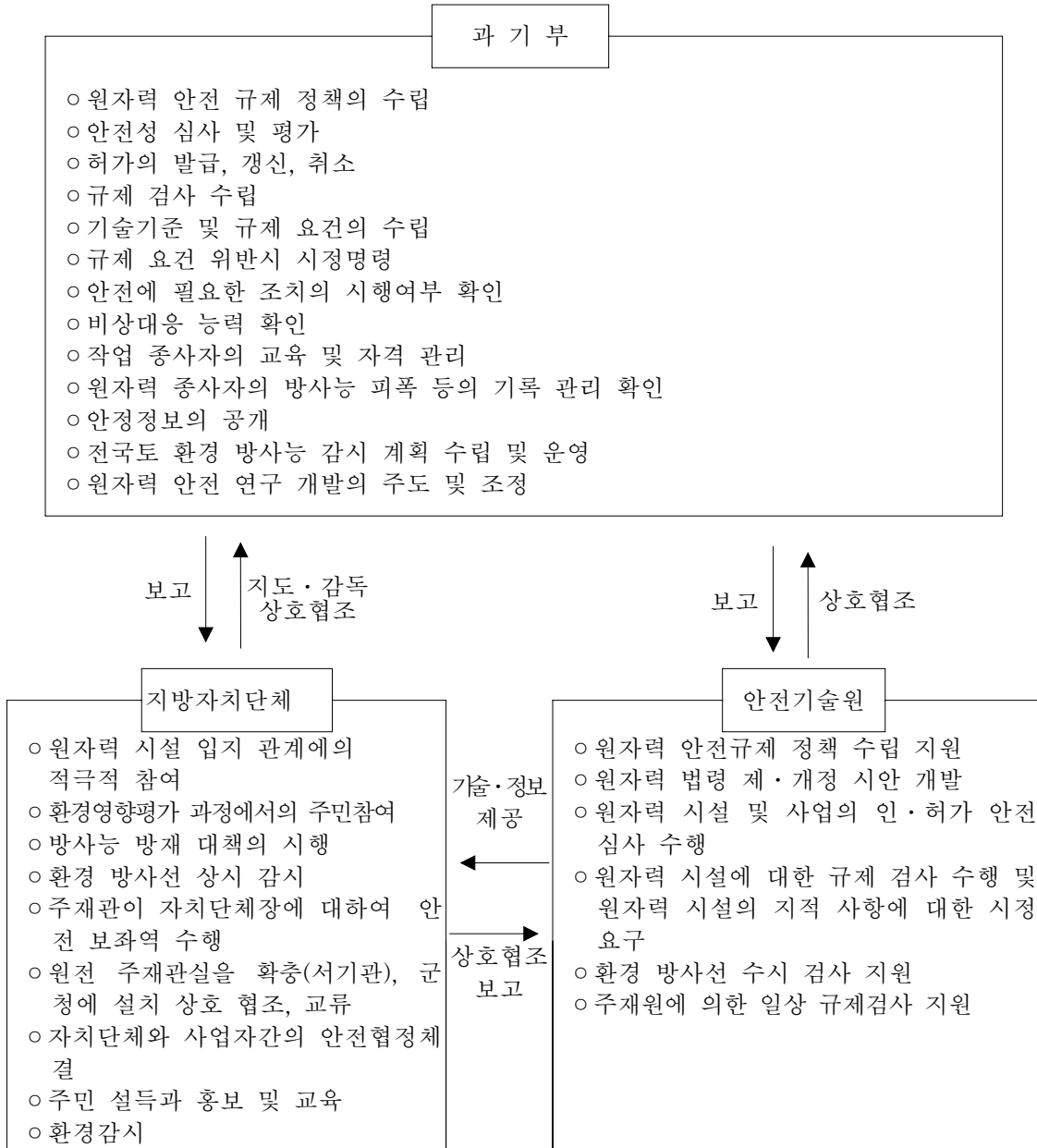
Ⅲ. 자치단체와의 안전규제 역할분담 방안

1. 자치단체와의 안전규제 기능분담 방안



<그림-1> 자치단체와의 안전규제 기능분담 방안

2. 지방자치제하의 원자력 안전규제 모델



<그림-2> 원자력 관련 주요기능의 분담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체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에 다음과 같은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적절한 역할분담

- ① 자치단체 : 지역이해 및 현장성이 많은 부문
 - 원자력 시설입지단계에의 적극적 참여
 -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행정의 주관
 - 방재대책의 시행/환경방사선(선량율등)상시감시
- ② 중앙정부 : 국가정책 및 전문기술성이 많은 부문
 - 원자력이용개발의 계획적 추진
 - 원자력안전규제 및 시설 등의 인허가
 - 환경방사능의 조사, 분석 및 평가

2) 책임과 권한의 일원화 및 중복행정의 최소화

- 3) 정부와 자치단체의 상호지원 및 정보공유체제 구축
- “원전주재관실”을 확충(서기관, 군청(도청)에 설치
 - 주재관이 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안전보좌역 수행

- 4) 소요전문인력과 예산의 최소화 및 안정확보
- 원자력사업 관련의 세원 개발(국세 또는 지방세)
 - 원자력안전담당 부서의 설치 · 지원

- 5) 원자력 발전과 지역협력
- 국가에 의한 교부금과 보조금 제도의 활성화
 - 지역문화의 지원
 - 지역주민들의 욕구와 환경의 충족

IV.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감시기구의 실태 분석

1.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표-1> 우리나라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발전소 내 용	고리 원자력발전소	월성 원자력발전소	영광 원자력발전소	울진 원자력발전소
발전소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	경북 경주시 양남 면 나아리	전남 영광군 홍농 읍 계마리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
민간감시기구	고리원전민간 환경감시기구	월성원전 환경감시기구	영광원전환경 안전감시센터	울진원전민간 환경감시위원회
구성	6명	-	7명	12명
관련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상북도 경주시	전라남도 영광군	경상북도 울진군청

2. 민간 환경감시기구의 실태

1) 설립목적

각 지역에 설치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립목적은 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 및 안전활동을 감시,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 시설의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안전 등에 관한 감시 활동, 원전 주변환경 방사선 감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와는 별도로 지방자치의 민간단체가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양호한 생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립한다.

2) 법적 근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에 의해 설치 및 운영한다.

3) 활동 업무

이들 환경안전감시센터의 활동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원전 주변 환경방사선 선량률 감시
- 원전 폐기물 반출 확인 및 감시
- 환경 시료 채취(지표 해양 육상) 방사성물질축적 여부확인
- 연간 활동 결과 보고, 타원전 주변 감시기구와의 정보교류
- 선진 외국(특히 일본)의 감시기구 운영 실태 파악

3. 국외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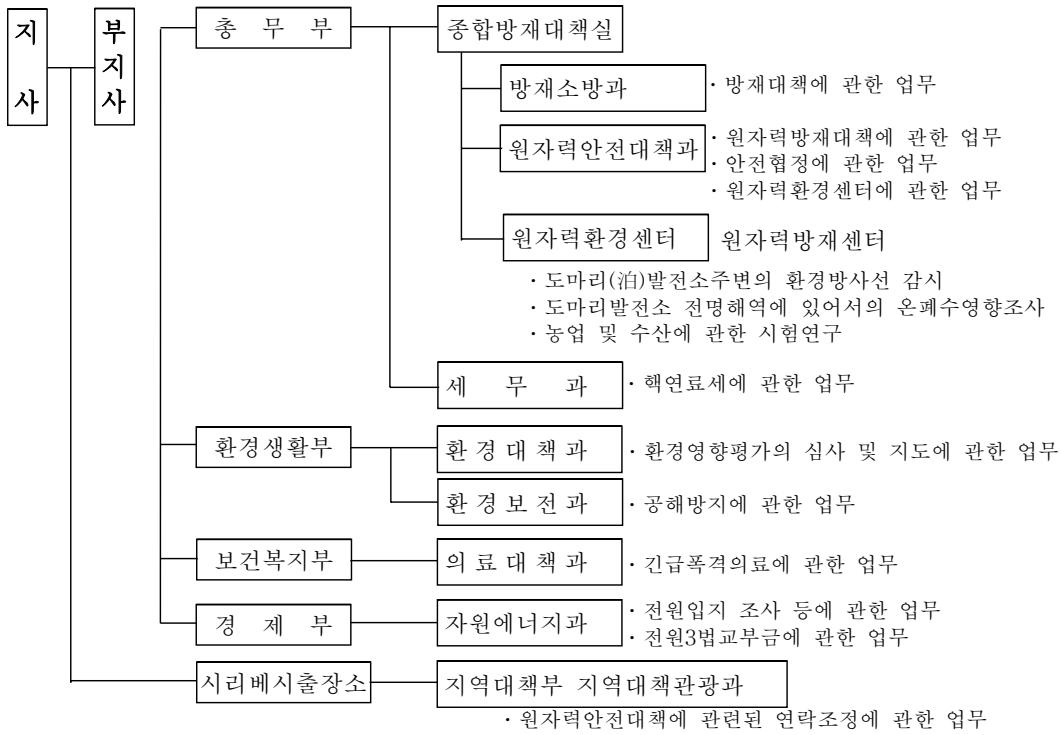
1) 일본의 원자력안전규제 조직

① 사가현 원자력행정조직

<표-2> 사가현 원자력안전행정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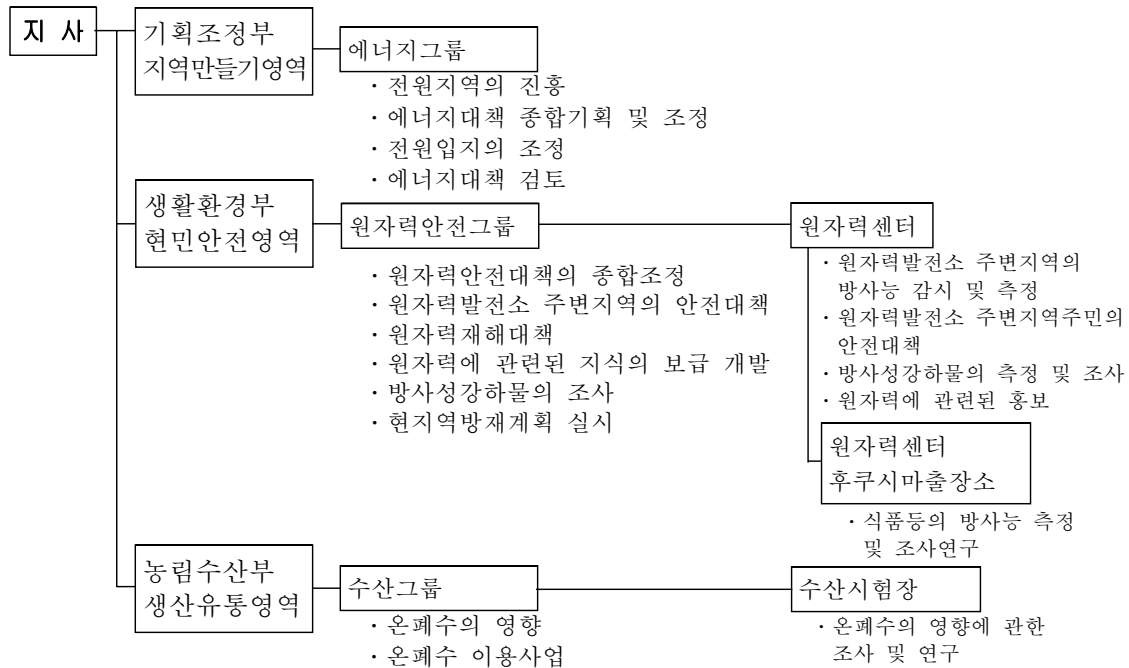
지 사	총무부	소방방재과	· 원자력방재대책의 기획조정
	후생부	의무과	· 원자력방재대책(의료대책)
		가라쓰시(唐津)보건소	· 환경방사능조사(survey meter 등에 의한 공간선량의 측정)
	환경생활국	환경과 원자력안전대책실	·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확보
		환경센터	· 환경방사능조사 · 원자력방재대책(원자력발전소의 상황과 악,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 원자력에 관한 지식 보급
	경제부	산업진흥과	· 발전소 주변지역의 진흥
수산림무국	어정과	· 온폐수의 영향조사	
	겐카이(玄海) 수산진흥센터		

② 홋카이도의 원자력 행정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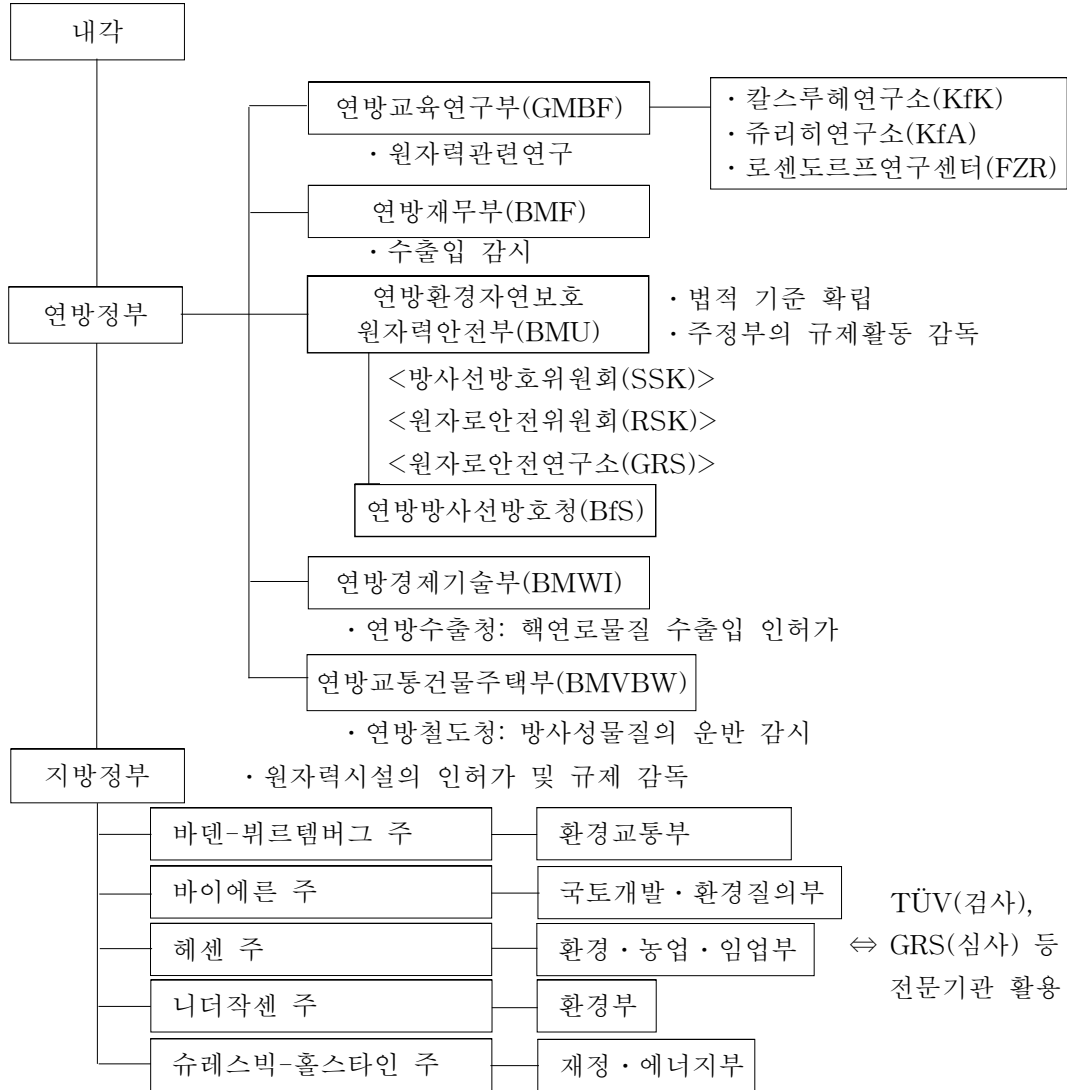
<그림-3> 홋카이도 원자력행정조직도

③ 후쿠시마현 원자력행정조직



<그림-4> 후쿠시마현의 원자력행정조직도

2) 독일의 안전규제원자력안전규제 조직



<그림-5> 독일의 원자력 안전규제 행정조직

V. 원자력 협력체제의 구축과 상세 실행방안

1. 중앙과 지방간 원자력 협력체제의 구축

원자력안전규제 정책에 있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한 중앙-지방의 협력이 긴요하다는 것은 이미 앞서의 연구들에 의해서 강조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지방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의 현안으로 남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앙과 지방간 협력관계의 긴요성을 강조하지만, 과연 어떤 방향으로 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추진해 가야 하는지

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1) 중앙-지방간 원자력정책 협력체제의 현황

- ① 중앙-지방간 원자력정책 협력체제의 현황
- ② 행정사무의 지방이양
- ③ 원자력정책의 분권화 또는 지방이양 문제
- ④ 동기유발 및 유인제공의 문제
- ⑤ 자치입법권의 확대
- ⑥ 원자력정책기능의 지방이양의 추진
- ⑦ 원자력안전관리능력의 제고를 위한 입법적 조치, 행·재정적 지원
- ⑧ 인사개혁의 방향

2) 원자력행정의 협력체제 구축방안

- ① 원자력행정체제와 기능배분
- ② 지방화에 따른 원자력행정기능의 변화필요성
- ③ 원자력기능배분에서의 차등적 분권 제도와 문제점 역할분담 실행방안
- ④ 국내와 선진국간 원자력행정기능 차이
- ⑤ 지방자치단체의 원자력행정기능 강화
- ⑥ 현행 지자체 원자력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안전규제 역할분담 실행방안

1) 원자력 행정조직의 문제점

- ① 지자체의 원자력조직체계의 취약성
- ②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원자력행정조직으로 편성
- ③ 독립적인 원자력행정조직구성의 어려움
- ④ 지방자치단체의 원자력조직이 사업별과 기능별로 혼재

2) 지자체의 원자력행정인력 문제점 및 강화방안

- ① 문제점
 - 원자력행정인력의 절대 부족
 - 중앙에 비해 원자력행정인력의 전문성 저하
 - 원자력업무담당자 중 전문직의 비율이 낮음
- ② 강화방안
 - 원자력인력의 적극적인 충원
 - 전문직의 원자력인력 제고

3) 지자체의 원자력업무의 문제점 및 강화방안

- ① 문제점

- 기초단체의 자율성 부족
- 기초단체의 고유업무만도 감당하기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 업무수행의 한계

② 강화방안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내의 원자력정책수립 및 원자력행정을 독자적으로 집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지방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나 규칙을 통해,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는 규칙을 제정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원자력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원자력행정의 운영능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지원이나 재난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안전기술원이 채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자치단체들의 비전문적 행정을 지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4) 원자력 관련재원의 문제점과 강화방안

① 문제점

첫째, 원자력관련 정책을 보는 지방일선공무원의 시각이 세입확충과 예산지출의 효율성 양쪽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예산지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여전히 낭비적 요인이 발견되고 있다.

② 강화방안

집권화된 정책집행구조보다는 분권화된 구조가 선호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먼저 원자력관련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충분한 재원을 지방정부가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동시에 확보된 재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원자력관련조직과 인력의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과 자치인사권의 개선방안

광역자치단체 원자력행정조직과 담당업무의 표준모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원자력 관련 조직과 인력을 <표-3>과 같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치조직권과 자치인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표-3> 광역자치단체 원자력행정조직과 담당업무의 표준 모형

경제통상실	원자력안전 자원대책과	· 원자력발전의 안전에 관한 종합조정
		· 안전협정*
		· 환경방사선의 감시(방사선감시 등 교부금)
		· 원자력발전소 주변환경감시 평가회의
		· 원자력발전소 주변환경 방사선측정기술 연합회의
		· 원자력발전에 관한 홍보(홍보·안전 등 대책교부금)
	· 전원입지의 조정,진흥대책(전원입지특별교부금,전원 입지촉진대책교부금)	
	방사선감시센터	· 환경방사선의 감시, 분석, 조사연구
소방본부	소방방재과	· 원자력방재대책(원자력발전시설 등 긴급시 안전 대책교부금)
		· 원자력방재훈련
복지보건부	의료대책과	· 원자력방재에 관련된 긴급시 의료대책
농림수산부	수산과	· 온폐수영향조사 · 온폐수 등 어업조사기술 연합회의
	수산해양연구소	· 온폐수영향조사의 실시 · 어장환경의 보전 및 어업피해대책에 관한 업무
자치행정국	세무과	· 핵연료세의 부과징수
환경국	환경보호과	· 안전협정에 의거한 환경보전대책 · 환경영향평가의 심사 및 지도에 관한 업무 · 공해방지에 관한 업무

* 일본 青森縣, 東通村, 東北電子 등 3사는 2005년 7월에 운전이 시작될 東通 원전 1호기에 관한 안전협정을 체결함. 안전협정인 「東通 원전주변의 안전성확보 및 환경보전에 관한 협약서」 에서는 발전소 운전에 따른 안전확보나 환경보전, 정보공개, 평상시의 보고사항 등이 규정됨.

VI. 결론(연구요약)

1. 정부간 관계와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

- 1)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정부간 관계는 “다양한 정부단위간의 원자력 안전규제 기능을 중심으로 작용하는 법적·제도적·정치적·행정적·재정적 제 관계의 설정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 2) 지방이양(devolution)은 위임(delegation)과 달리 정책결정권은 중앙과 지방간 어느 정도 나누어져야 한다는 정치적 분권화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간의 동반자관계(partnership)로의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
- 3) 원자력 관련기능의 이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과 인력의 이양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자치단체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의 성격과 범주를 구체화하는 한편 이양유형에 따른 행·재정이양의 구체적인 방식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2. 자치단체와의 안전규제 역할분담 방안

- 1) 원자력안전규제 기능분담은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기술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주민이라는 네 주체사이에 합리적이고 동태적이며 상호협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2) 원자력안전관리 주체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업무와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
- 3) 중앙정부가 원하는 아니든 어떤 시기가 되면 원자력시설이 위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분적으로나마 원자력규제행정의 일부를 주체적으로 시도할 것은 분명하다.
- 4) 지방자치가 지역사회에 정착되어 활성화되어 간다면 원자력안전규제기능도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게 합법적, 합목적적, 합리적 그리고 효율적으로 분담되어야 한다.
- 5) 원자력 선진국에서의 안전규제 조직, 관련 법규, 규제절차, 운용현황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규제 행정체계의 모델 정립에 참조할 필요가 있다.

3.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감시기구의 실태 분석

- 1) 지방자치단체의 원자력정책에 관한 역할과 권한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
- 2) 원자력정책의 분권화 또는 지방이양 문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간 협력체제의 구축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 3) 중앙-지방간 원자력협력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원자력정책적 역할을 강화하는데 있다.
- 4) 원자력관련조례제정권 즉 조례입법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 5) 중앙-지방간 원자력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원자력안전관리능력을 제고하는 일(capacity building)이다.
- 6) 원자력관련기능의 차등위임과 사후관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기부가 원자력안전관리에 소극적인 지방자치단체를 통제·유인하고, 우수한 자치단체를 격려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 7)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규칙을 통하여 자신의 관할 구역 내의 원자력관련 사무를 관장할 수 있다.

4.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의 현황과 문제점

- 1) 일반적으로 지방정부가 원자력업무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원자력문제를 관리하는 조직, 그 조직에서 업무를 보는 전문가로서의 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원자력관련수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5. 원자력 협력체제의 구축과 상세 실행방안

- 1) 일반적으로 지방정부가 원자력업무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원자력문제를 관리하는 조직, 그 조직에서 업무를 보는 전문가로서의 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원자력관련수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원자력행정조직을 편성하고 있지 못하다.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들은 거의 동일한 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와 상응하게 조직이 편성되어 있어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율적인 원자력행정을 수행할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장기적으로는 원자력관리조직의 체계를 정비할 때, 기능별로 조직의 내부체계를 재편해야 한다. 현재처럼 사업부형태의 조직과 기능별 형태의 조직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
- 3) 지자체의 원자력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내의 원자력정책수립 및 원자력행정을 독자적으로 집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지방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나 규칙을 통해,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는 규칙을 제정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원자력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원자력행정의 운영능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지원이나 재난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안전기술원이 재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자치단체들의 비전문적 행정을 지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 4) 지방자치단체와 원자력 관련 조직과 인력을 <표-3>과 같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치조직권과 자치인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천영(1998), “정부간 관계의 개념, 논리 및 역사적 전개 과정의 서설적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제7집, 연세행정연구회.
- 김관석·권경득(1999),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 개혁”, 「한국행정학보」 제33권 제1호, 한국행

정학회.

- 박혜자(2002), “지방이양과 중앙-지방정부간 사무배분체계의 변화”, 「한국 사회와 행정 연구」 제13권 제3호, 서울행정학회.
- 사득환(2002), “정부간 관계(IGR) 변화와 지방정부간의 환경협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4권 제1호 통권37호, 한국지방자치학회.
- 오성호(1997), “공무원의 능력발전 진흥방안: 행정개혁을 전제한 근무평정과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한국행정학보」 제31권 제4호, 한국행정학회.
- 이성덕(2002), “중앙·지방정부간 사무배분에 대한 성찰-관련 분석 도구들을 중심으로”, 「2002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 이성복·김주환·정용택(2003), “지자체의 환경행정조직 강화방안”, 「2003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 채경석(2002), “지방정부의 정책은유와 집행전략 : 영광, 울진 원전 집행사례”, 「2002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2003), 「지방자치단체와의 안전규제 역할분담 방안연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Anderson, William.(1960),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Review*,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Gargan, John J. (ed.)(1997), *Handbook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Marcel Dekker, Inc.
- Japan, National Report for The Convention on Nuclear Safety, September, 1998.
- Smith, B. C.(1985), *Decentralization : The Territorial Dimension of the State*, London: George Allen & Unwin.
- Wright (1988), *Understand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3rd ed.), California, Pacific Grove: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http://atom.pref.ishikawa.jp>
- <http://wolsungnews.com>(월성원전환경감시단,월성뉴스)
- <http://www.busan.go.kr>(부산광역시청)
- <http://www.gijang.busan.kr>(기장군청)
- <http://www.gyeongbuk.go.kr>(경상북도청)
- <http://www.gyeongju.gyeongbuk.kr>(경주시청)
- <http://www.jeonnam.go.kr>(전라남도청)
- <http://www.khnp.co.kr>(한국수력원자력(주))
- <http://www.khnp.co.kr/kori/index.html>(고리원자력본부)
- <http://www.khnp.co.kr/ulchin/index.jsp>(울진원자력본부)
- <http://www.khnp.co.kr/wolsong/index.jsp>(월성원자력본부)
- <http://www.khnp.co.kr/youngkwg/index.html>(영광원자력본부)
- <http://www.uljin.go.kr>(울진군청)
- <http://www.yeonggwang.jeonnam.kr>(영광군청)
- <http://www.ygn.or.kr/html/state-radition.htm>(영광원전환경안전감시센터)